SF 2017-17

안보포커스

SECURITY FOCUS

발행일 2017년 11월 23일

APEC 韓中정상회담 중국측 의도 : 중국의 사드 철수 종용

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

【 차 례 】

《요 지》

1. APEC 韓中정상회담 주요 내용 ····· 1

2. 중국측 반응 및 의도 ····· 2

3. 평가 및 정책적 제언 ····· 5

《요 지》

❑ APEC 韓中정상회담의 중국측 의도

○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존입장 반복 및 사드 철수 압박 지속

- 중·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'관건적' 시기
- 양측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정치적 상호신뢰를 지켜야 함
- 양측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, 중·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함
-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,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

○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은 사드 철수라는 최종단계 적시

- 중국은 짧게는 文대통령의 12월 방중, 길게는 시(習)주석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을 두고 사드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지속 활용하고자 함

○ 결국,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의 사드 철수 종용(慫恿)으로 귀결

- 중국 통일전선조직의 협상술이 적용된 실리주의 회담
- "不義는 참아도 不利益은 참지 못한다"는 중국인의 본심을 드러냄

❑ 평가 및 정책적 제언

○ 평 가

- APEC 韓中정상회담 역시 對中 굴욕외교의 연장선
- 10.31 한·중 협의 발표의 이면합의 논란 등 중국의 한국 흔들기 지속
- 중국은 미국 조야의 보수층 불만 여론 형성을 유도, 한미동맹 흔들기 시도
- 10.31 한·중 협의에서 수용된 '3不원칙'으로 미국이 NATO 라인을 따라 아시아에서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중국의 목표 달성

○ 정책적 제언

- APEC 한중정상회담의 양국 발표문과 10.31 한·중 공동발표문 관련, 중국측과 청와대간 발표내용의 차이 및 이면합의 논란 강력 추궁
- 한미동맹의 진화 및 한중관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黨·민간 합동의 對美•對中 '공공외교특별위원회'의 당내 설치

1. APEC 한중정상회담 주요 내용

❑ 文대통령-시진핑주석 한중정상회담(11.11)

○ 文대통령 : '매경한고(梅經寒苦)' 인용, 양국 관계개선의 희망 피력

- 한중관계 복원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큰 원칙만 합의

○ 시진핑 주석 : 사드 배치 반대,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 필요 주장

- 중·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'관건적' 시기

- 양측은 핵심이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켜야 함

- 양측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, 양국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정책 결정을 해야

- 중국은 한반도비핵화,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

※ 시진핑 주석 G20 정상회의時(7.6) "중·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'장애물'을 제거해야" 발언

❑ 文대통령-리커창총리간 회담(11.13)

○ 文대통령 : 한중관계의 정상 발전궤도 희망

○ 리커창 총리 : 단계적 사드 철수에 대한 한·중 공동인식 달성

- 양국은 단계적으로 사드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동인식 달성

- 한국이 양국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고, 중·한 관계 발전 희망

[한·중간 사드 갈등 관련 일지]

일 시	주 요 내 용
2016. 2	• 한·미, 사드 배치 협의 결정 발표 → 中외교부, '사드 배치 반대' 성명
2016. 7	• 한·미, 사드 배치 공식발표 → 中 외교부, '강렬한 불만, 단호한 반대' 성명
2017. 2	• 국방부,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→ 中외교부 대변인, "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… 모든 뒷감당은 한·미의 책임"
2017. 4	• 사드 전격 배치 착수
2017. 7	• 習주석, 韓中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 거론
2017. 10	• 중국 19차 당대회 개최 • 한·중 외교부, '한·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' 발표

2. 중국측 반응 및 의도

❑ 韓中정상회담 결과 내용에 대한 상이한 보도로 논란 촉발

○ 중국 언론들의 반응과 해석(11.11)

- 관영 신화통신 : 사드와 관련된 기존입장을 반복
  • 사드문제와 관련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결정 촉구

-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: 사드 반대 시주석 발언 상세히 전달

○ 청와대 한밤중 긴급 브리핑 논란

- 비공식 브리핑 해명 : 中 사드 반대입장 다시 환기한 것 뿐
  • 시주석이 文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사드문제를 거론한 것은,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한·중 관계를 정상화 하자는데 무게를 두는 발언 과정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입장을 다시 환기

•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임

⇒ 이러한 청와대의 변명은 사드문제에 대한 시주석의 긍정적인 평가만 취사선택하여 브리핑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태도로 평가

※ 이슈브리프(2017-13) "10.31 한·중 협의, 文정부의 對中 굴욕외교 전형" 참조

❑ 시진핑 주석 발언의 재해석

○ '관건적 시기'의 의미 :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유보적 입장의 우회적 표현

- 중국 특유의 간접화법으로 우선 한.중 관계개선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없음

- 큰 틀에서의 원론적 수준 발언을 통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임

- 결국 사드 갈등 봉합조건으로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중국측의 결기를 보여줌

- 또한 10.31 한·중 협의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'3不 정책'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피력

※ 3不 정책 :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(MD) 편입, 사드 추가배치 검토, 한·미·일 군사 동맹 등의 不可

- 한편으로 미.일 중심의 거시적 외교전략 '인도·태평양(Indo-Pacific) 구상'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 입장을 주시하겠다는 의미

○ ‘핵심이익’과 ‘역사에 대한 책임’의 의미 : 사드 철수 압박

- ‘역사에 대한 책임’은 한국측 발표내용에는 소개되지 않은 발언
  - 한반도 사드 배치를 “핵심이익의 침해”로 규정한 시주석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‘평화로운 大國외교’와 자기 체면을 위한 ‘국내용 정치적 위상을 위한 발언’이며,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‘중대 우려’로 간주한다는 메시지
  -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앞으로 ‘중국의 우려를 살 만한 정책’을 채택해서는 안되며, 한국의 정책에 따라 한중관계가 경색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

- 중국언론을 통해 시주석의 사드 입장 되풀이를 보도한 것은 한국의 책임있는 태도 결정, 곧 한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 것

- 종국에는 한국의 사드 철수를 우회적으로 압박

○ ‘한반도 비핵화,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대화와 협상’의 의미 : 중국의 ‘3대 견지’ 기존 입장 변화 없음

- 중국의 기본입장인 ‘3대 견지’의 재확인

※ ‘3대 견지’는 ‘쌍궤병행(雙軌竝行: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의 동시진행)’과 ‘쌍중단(雙中斷: 북핵·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)’을 강조한 것

- 한·중은 북핵문제의 ‘평화적 해결’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하지만, 한국은 대화의 입구(핵동결)→대화의 출구(핵폐기)라는 ‘단계적 접근법’ 제시와 중국은 쌍궤병행·쌍중단 강조로 인해 사실상 북핵문제의 구체적 해법에 대해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

○ 리커창 총리의 “양국은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했다”에 담긴 의미 : 종국적으로 사드 철수의 단계적 달성

- 10.31 공동발표문은 첫 단계이며, 최종단계는 사드 철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

- 중국은 짧게는 文대통령의 12월 방중, 길게는 시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두고 사드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지속 활용하고자 함

3. 평가 및 정책적 제언

❑ 평 가

○ APEC 한중정상회담은 중국 입장 재확인 자리 : 사드 철수 종용(慫慂)

- 10.31 공동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對中 굴욕외교의 연장선

- 한·중 관계의 ‘변수’로 자리잡은 사드문제의 봉합보다는 ‘불안한 사드 봉인(封印)’ 평가가 보다 적절

- 한중관계 개선 때문에 한·미·일 3국 연합훈련을 한국이 반대함으로써 한·미와 미·일이 각각 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, 안보까지 양보한 3不 원칙은 안보주권 포기 논란을 확장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

○ 3不 : 대한민국 안보의 自充手

- 3不 원칙은 앞으로 한국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으며, 중국은 '3不'을 빌미로 한국정부를 압박할 가능성 우려, 결국 우리의 미래 주권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저당잡히는 결과

- 10.31 공동발표문에 한국의 사드배치는 △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△주권적 안보결정이라는 내용이 빠져있어 사드배치 목표와 본질 등을 명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권을 훼손, 외교 지렛대를 없앤 외교부의 아마추어 행태이며, 3不 표명 자체가 매우 非전략적

- 미국의 '인도·태평양 구상'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갈팡질팡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실망스러운 모습

- 중국이 사드문제를 포괄적 개념으로 볼 때, 미국이 한국,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·태평양 구상에 포함 시키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한·미·일 동맹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맞물려 언제든 폭발성 높은 갈등사안으로 표출 가능

- 文정부는 도식적 균형의 틀 속에서 외교에 나서겠다는 균형외교와 3不 원칙 고수 강조 등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발언만 계속

⇒ 駐韓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문화일보 "권력 내부의 '反美성향'이 더 문제다" 기고(11.8)에서 "故 노무현 前대통령처럼 文대통령도 운동권의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. 기본적으로 권력 내부의 反美성향이 더 문제" 임을 지적

○ 향후 한중관계 : 사드 철수 前까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문제로 전락

- 인민일보는 “중국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”는 시주석의 발언과 함께, 정작 한중정상회담 중국측 발표문에서는 文대통령의 방중 언급이 없어 청와대의 발표와 차이를 보임

- 한중정상회담 발표문의 차이는 결국 중국이 양국관계 개선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징표

- 결국 APEC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외교적 실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으며, 이에 따라 우리국민의 의구심과 함께 자존감 또한 심각히 훼손된 것으로 평가

❑ 정책적 제언

○ 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한 중국의 통일전선(United Front) 조직에 대한 이해 필요

- 중국은 문혁 이후 유교주의를 벗고 철저히 실리주의로 변했으며, “不義는 참아도 不利益은 참지 못한다”는 것이 중국인의 본심

-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협상술이 적용

※ 공산당의 협상술

① 협상 전엔 강경한 어조로 협박, ② 불리한 의제는 안건에서 제외, ③ 협상 땐 모호한 문자로 의무를 회피, ④ 협상 뒤엔 문안의 임의 해석 ⑤ 협상 상대의 분란 등 최대한 활용

- 중국 외교부는 게시한 자료와 관영 신화통신(11.14)을 통해 최종단계는 사드 철수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 브리핑은 사드 자체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강력한 추궁 필요

- 10.31 한·중 협의 발표 뒤에 있었던 이면합의 논란은 중국 특유의 '협상後 전술' 때문으로 보이므로, 이면합의 존재에 대한 對정부 강력한 추궁 또한 필요함

○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당·민간 합동의 對중국 소통 채널 구축 시급

- '黨대黨' 의원외교 및 1.5 트랙의 韓·中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을 통해 사드 봉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

- 위안화(경제이익)가 쏟아지면 '안보의 대가'는 잊힐 것이라는 점 그리고 文정부가 일부 국민의 이런 성향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, 黨·민간 공동의 '對中 공공외교특별위원회'의 당내 설치

○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진화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黨·민간 합동 '對美 공공외교특별위원회'의 당내 설치

- 미국 보수층과의 연대와 결집을 통해 우리黨의 대외협력 창구 역할 기대

- 한·미 양국 보수층의 연합전선 형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모델 모색

재단법인
여의도연구원

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
TEL : 02. 3786. 3800 E-mail : ydi@ydiins.or.kr Website : www.ydi.or.kr